
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2019. 7.

< 목 차 >

1. 중견기업 범위에 금융·보험업 포함	1
2.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3
3. 중견기업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5
4.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	7
5. 상속세율 완화	9
6.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제도 개선	11
7.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보완	13
8.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15
9. 최저임금 제도 개선	17
10. 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 논의시 노사관계 관행제도 개선 ..	19
11.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중 검토	21
12.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23
13. 적대적 M&A 방어 장치 도입	26
14. 기업집단 부실기업 등 인수시 계열 편입 유예	28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중견기업법령은 금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중견 성장 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 발생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금융·보험 기업 : 매출액 400억원 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금융·보험 기업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 중견기업 정의(중견기업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업
- 자산총액 10조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금융업, ② 보험 및 연금업, ③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닌 기업
- 「민법」에 따른 비영리기업이 아닌 기업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보험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할 필요

* '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세계 74위(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 중견기업 범위에서 금융·보험업이 제외됨에 따라 각종 세제·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특히,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인터넷전문은행, P2P,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 기업 성장 등 산업·금융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함

- * 정부는 최근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개정('19.7.9 시행) 시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을 추진하였으나 미반영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9.3.8~4.16) 주요내용 중>

가.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 포함(제2조제2항제2호 삭제, 별표 1에 금융 및 보험업 추가)

- 1) 현행 규정 상 금융 및 보험업이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융·보험업 영위 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 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非) 금융업 종사 기업들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겸영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종래 중소기업이었거나 기존 중견기업인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등의 혼란 발생
- 2) 금융 및 보험업 영위 기업도 다른 업종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 졸업 시 중견기업으로 포함되도록 함
- 3) 금융 및 보험업 영위 기업들도 인력 지원 등과 같은 일부 중견기업 시책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고 비(非) 금융업 종사 기업들이 금융 관련 신사업 진출 시 예기치 않은 기업 분류의 변동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의내용

- 금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17.11.2)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18.1.1 시행)

구 분	요건 및 내용	관련 법령
피인수 중소·벤처기업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요건(매출액 등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 충족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인수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
변경내용	· 피인수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기간 확대 : 3년 → 7년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기간과 동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삭제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대기업집단 피인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위 7년간 유지된다, '17.12.29

-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시 7년간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반면, 중견기업 피인수기업은 중소기업 지위를 3년간만 부여하고 있어 역차별 발생
- 피인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편입될 경우 세제·금융·판로 등 각종 지원이 축소되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M&A할 유인이 부족하며, 인수하더라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등에 어려움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인수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산업 창출 및 M&A 시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필요

□ 건의내용

-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 실효성 제고 및 피인수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피인수 중소기업에 대해 7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 핵심소재 및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 개발이 절실한 상황

- 제조 중견기업은 40.4%*가 1차 협력사로 대기업과 수위탁 거래를 통해 부품 및 소재를 납품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지원할 경우 핵심소재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그러나 중견기업의 연구집약도는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한 연구 개발 투자 유인책이 필요

* 중견기업 연구집약도 : ('15)1.05%→('16)0.97%→('17)0.81%(중견련 내부자료)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고, 각종 정책자금 및 세액공제 혜택도 축소됨에 따라 비용 부담이 증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25%→(중견기업)8~15%→(대기업)0~2%
(중견기업 진입연차별 세액공제율 : (1~3년차)15%→(4~5년차)10%→(6년차 이상)8%)

- 중견기업은 신사업 진출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수요가 큰 기업군으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중견 성장의 문턱을 낮추고 혁신 역량을 높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인상(각 구간별 5%)시 경제적 효과>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산유발액(억원)	75,278	78,382	81,613	84,978	88,481
취업유발인원(명)	25,451	26,500	27,593	28,730	29,914
고용유발인원(명)	18,293	19,047	19,832	20,650	21,501

*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9.2월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대상을 미래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등 일부 기술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견기업 지원 대상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만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제도 활용도 둔화***

* 조특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 매출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수(비중) : 338개사(7.6%) ('17년 말 기준, 중견련 내부자료)

*** 중견기업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비 비중 : ('15)4.33%→('17)1.86%
(기획재정부,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18.9월)

- 대상기술을 국산화가 시급한 부품소재 산업 품목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필요

□ 건의내용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당기분방식)
 - (현행) 중견기업 1~3년차 15%, 4~5년차 10%, 6년차 이상 8% ⇒ (건의) 중견기업 1~3년차 20%, 4~5년차 15%, 6년차 이상 13%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지원 대상* 및 기술 확대
 - * (현행)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 (건의)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4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상향 및 일몰 연장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현황 및 문제점

-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9년 투자규모는 170조원으로 전년대비 6.3% 감소 예상
- 2019년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는 대폭 감소할 전망(중소 △24.6%, 중견 △31.3%)

<2019년 설비투자 계획>

(단위 : 조원, %)

	금액			증가율	
	2017	2018	2019	2018	2019
전 체	189.8	181.5	170.0	△4.4	△6.3
대 기 업	150.5	145.0	143.7	△3.7	△0.9
중견기업	18.0	18.2	12.5	1.1	△31.3
중소기업	21.3	18.3	13.8	△14.1	△24.6

* 자료 :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2018.12 제87호

- 설비투자 및 시설투자 등의 세액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음

<중견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관련 세제지원 축소 현황>

연구시험용· 직업훈련용 시설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5%→3% (‘15년 개정)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5%→3% (‘16년 개정)	생산성향상시설투자 5%→3% (‘17년 개정)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 7%→5% (‘18년 개정)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당기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

* 2017년 조세특례심층평가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기획재정부, '17.9월)

-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을 상향(3%→5%)할 경우 생산 및 고용·취업을 유발하여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인상(3%→5%)시 경제적 효과>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산유발액(억원)	25,818	26,664	27,538	28,441	29,373
취업유발인원(명)	8,729	9,015	9,310	9,615	9,931
고용유발인원(명)	6,274	6,479	6,692	6,911	7,138

*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9.2월

-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대규모 시설 투자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 및 집행이 필수적인 만큼 3년 이상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대/중견/중소 1/3/7% → 2/5/10%(관계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9.7.3)

□ 건의내용

-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

제 도 명(일몰연도)	현행 공제율			건의안		
	중소	중견	그 외	중소	중견	그 외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투자('21)	7%	3%	1%	10%	5%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21)	7%	3%	1%	10%	5%	3%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21)	10%	5%	3%	10%	7%	5%
안전시설 투자('19)	7%	3%	1%	10%	5%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19)	7%	3%	1%	10%	5%	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19)	6%	3%	1%	10%	5%	3%

* 일몰연장('19년→'22년) : 안전시설 투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35개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음

*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감안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65%로 세계 최고 수준

- 국세청 세수 중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0.8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경제 전체에서 가족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세액에 비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국세청 세수 대비 상속세 금액과 비중>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국세청 세 수	1,575,286	1,543,305	1,660,149	1,801,532	1,920,926	1,902,353	1,957,271	2,081,615	2,333,291	1,863,970
상속세	11,817	12,207	12,028	12,586	17,185	15,865	16,961	19,437	19,949	15,337
	0.75%	0.79%	0.72%	0.70%	0.89%	0.83%	0.87%	0.93%	0.85%	0.82%

* 국세통계연보(해당 연도)

- OECD 국가 중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 13개국은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상속세 부과에 따른 경제위축, 국부유출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아예 도입하지 않음

*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 또한 부의 대물림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전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사망한 경우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등을 과세

- 독일, 영국 등 15개국은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부의 이전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유지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 등 7개국 뿐

<OECD 국가의 상속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2018년 기준)>

①상속세율>소득세율 (7개국)	②상속세율=소득세율 (1개국)	③상속세율<소득세율 (15개국)	④상속세 폐지 또는 미도입 (13개국)
일본(55%>45%) 한국(50%>42%) 스위스(42%>11.5%) 미국(40%>37%) 덴마크(36.25%>23.08%) 스페인(34%>22.5%) 헝가리(18%>15%)	프랑스(45%=45%)	상속세율 10% 초과 (8개국) 영국(40%<45%), 아일랜드(33%<40%), 벨기에(30%<50%), 독일(30%<45%), 칠레(25%<40%), 네덜란드(20%<52%), 핀란드(19%<31.8%), 슬로베니아(14%<50%) 상속세율 10% 이하 (7개국) 그리스(10%<45%), 터키(10%<35%), 아이슬랜드(10%<31.8%), 리투아니아(10%<15%) 폴란드(7%<32%), 룩셈부르크(5%<40%), 이탈리아(4%<43%)	캐나다('71년) 호주('79년) 이스라엘('81년) 뉴질랜드('92년) 포르투갈('04년) 슬로바키아('04년) 멕시코('05년) 스웨덴('05년) 오스트리아('08년) 체코('14년) 노르웨이('14년) 에스토니아(미도입) 라트비아(미도입)

- ① 부의 이전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유지
- ② 상속과 소득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부과
- ③ 피상속인이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과세된 재산에 상속세를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관점에서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
- ④ 상속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기회 균등 보다 자본의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소득재분배라는 판단으로 상속세를 폐지 또는 미도입

*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 건의내용

- 기업승계 상속세율을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최고세율을 OECD 평균 25% 수준으로 조정
- (현행) 50% → (건의) 25%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현황 및 문제점

- 상속세 및 증여세는 기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기업승계시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10%~50%의 누진구조이며,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고려하면 최대 65%로 세계 최고 수준
 - * (지분율 50% 이하) 중소 10%, 그 외 20%, (지분율 50% 초과) 중소 15%, 그 외 30% (단, 중소는 '20년 말까지 할증평가 적용제외)
 - 기업승계를 하더라도 세금 납부를 위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으며,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 유지 및 방어가 어려움
-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으로 기업의 활용이 저조
 - * 가업상속 공제대상: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 ** (고용유지의무) 상속개시 직전 2개 연도 평균 80% 이상, 상속개시년도부터 10년간 120% 이상(중소 100%) 고용유지, (자산유지의무) 5년 90% 이상, 10년 80% 이상
 - 기업승계 후 10년간 120%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고용 유연성을 저해
 -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74.4건에 불과하며 공제금액도 1,807억원

<가업상속공제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평 균
공제건수	70	68	67	76	91	74.4
공제금액(억원)	933	986	1706	3184	2226	1807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8

- 기업승계 무산으로 폐업하게 될 경우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더 크며, 세계 각국도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추진 중(대한민국강소기업포럼, '11년)

* 폐지국가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시프러스,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홍콩 등

* 감면국가 : 스페인,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 건의내용

-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지원제도 개편
 -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3천억원 미만→1조원 미만) 및 공제한도 확대(5백억원→1천억원)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사전증여 공제한도(1백억원)를 가업상속 공제한도(5백억원) 수준으로 확대
 - 가업상속공제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폐지
 - 사후관리요건 완화 :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5년), 고용유지의무 방식 변경(근로자수→근로자총급여액), 업종 및 자산유지 요건 완화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18.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었으며, '20.1월부터 50인~299인 기업에도 적용 될 예정
 - 내년부터 중견·중소기업 대다수가 적용 대상이나, 인건비 부담, 구인난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기간까지 종료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업종별, 직무별 근로환경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중견기업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한 상황
-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경직적인 제도 운영 방식으로 인해 현장에 적용하는 데 한계
 - *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54.4%)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시급한 개선 부분으로 조사(중견련, 근로시간 단축 중견기업계 조사, '18.5월)
 - 기업과 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은 R&D로 최근 반도체 부품·소재 등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3개월) 및 선택근로제 정산기간(1개월) 등은 R&D, IT 서비스업 등의 기업 현장 상황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기준
 - 또한, 유연근로가 필요한 직무 근로자의 개별적 의사보다는 과반수 노조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노조가 반대할 경우 활용조차 할 수 없음

※ 유연근무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시간은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 일(日), 주(週)의 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
- (재량 근로제) 업무 성질에 비추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연구개발, IT 설계·분석업무 등*)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업무에 限

□ 건의내용

- 50인~299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부여
 -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위한 계도기간 9개월 부여('18.7월~'19.3월)
- 유연근무제 제도 개선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취업규칙) 2주→3개월 or (노사합의) 3개월→1년) 및 도입요건 완화(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해당 직무 근로자 대표 협의)
 -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3개월) 및 도입요건 완화(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개별근로자 합의)
 -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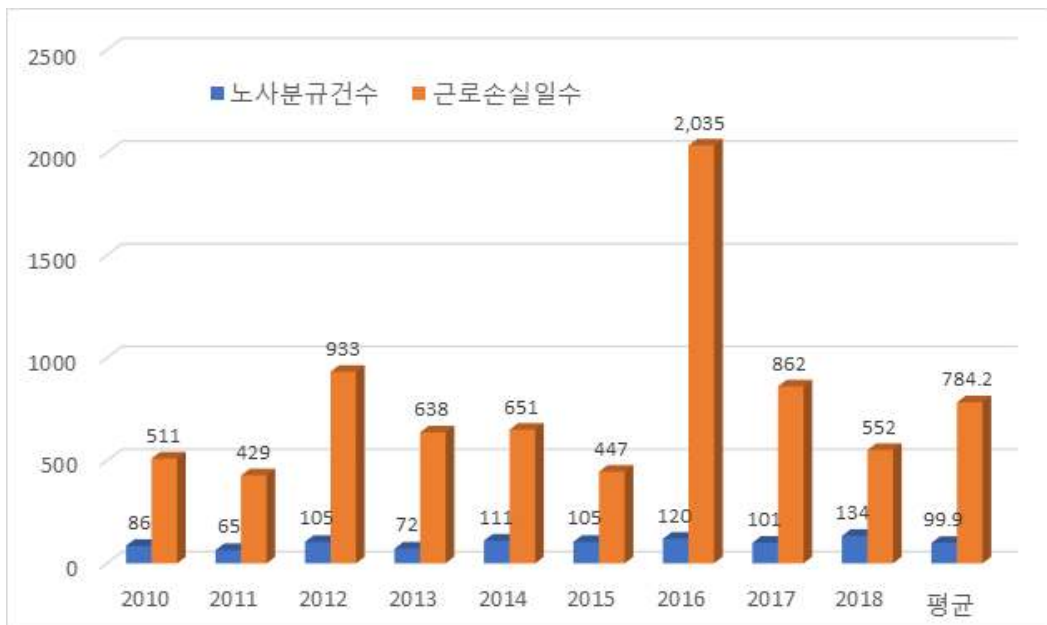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2018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 순위가 137개국 중 73위, 정리해고비용 112위, 노사 간 협력 130위로 낮은 수준
 - 불신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2018년 노사분규 건수는 134건, 근로손실일수는 552,000일에 이르며, 이로 인해 조업중단 및 생산차질 등으로 기업의 피해 증가

<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단위 : 건, 천일)



* 출처 : 고용노동부

- 반복되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혁신 경영 의지를 쇠퇴시킴
- 최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대한 노조의 불법시위, 타워크레인 노조의 불법 파업 등 노조의 초법적인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기업의 경영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
- 특히 건설노조의 자기노조원 채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현장 봉쇄, 작업 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해 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건의내용

-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노조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필요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으며, 급속한 인상이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됨**

* 2000년 1,60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연평균 9.1% 인상

**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그 원인으로 꼽음('19.5월)

- 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중견기업에게는 미래 투자와 고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상위권 국가 비교(2019)>

구 분	중위임금 대비	평균임금 대비	1인당 국민소득 대비
1위	터키(81.3%)	뉴질랜드(55.5%)	뉴질랜드(118.3)
2위	칠레(69.8%)	리투아니아(55.3%)	프랑스(114.7)
3위	리투아니아(68.0%)	슬로베니아(50.7%)	호주(100.3)
4위	포르투갈(66.0%)	한국(50.3%)	한국(100)
5위	뉴질랜드(64.6%)	프랑스(49.9%)	영국(94.6)
6위	한국(64.5%)	칠레(49.5%)	캐나다(93.9)
7위	프랑스(61.8%)	영국(48.2%)	독일(91.7)
OECD평균(28개국)	54.7%	43.4%	-

* 경총,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19.5월

- 현행 최저임금 제도('88년 시행)는 결정체계 및 심의기준 등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어 합리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

* 최저임금위원회는 1988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32회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는데 이 중 합의를 거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30년사, '18.3월)

-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 최근 IMF 이사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켜야 한다고 권고(IMF, 2018년 연례협의 보고서, '19.5월)
-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임금지급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기업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
 - * 일본(경상이익 증감, 기업수익 등), 영국(경제 전반 및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등 해외에서는 既 반영 중
- 또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실질 임금이 역전되는 문제점을 야기
 - 외국인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기숙사 등은 현물로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근로자보다 실질임금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는 국내 근로자 임금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 건의내용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명시
 - 경제성장률, 기업순이익률 등의 지표도 순차적으로 반영
-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최소화 등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 (현행) 1년 → (개선) 2년
-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를 제공한 경우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반영
 - * 숙박, 식사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추경호의원 대표발의, '19.6.24)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방식을 당초 ‘先 입법 後 비준’에서 ‘先 비준 後 입법’으로 입장을 바꾸어 발표(‘19.5.22)

*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제105호를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비준 추진

-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 일관성이 있어야 할 정부정책이 쉽게 바뀌는 건 향후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증대
- ILO 핵심협약 비준은 대립적·갈등적이던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틀을 협력적·타협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향후 법 개정은 노사 양측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 ILO 핵심협약 비준 시 단결권 확대로 비(非) 근로자인 해고자, 실업자 등까지 노조 가입이 가능해져 해고자 복직 투쟁, 불법점거가 확대되는 등 노사협력관계*가 더욱 악화 될 우려
 - *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노사협력은 140개국가 중 124위로 최하 수준(‘08년 95위→’18년 124위)
- 향후 국회 입법 시 조화롭고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해 기업이 불법 쟁의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

□ 건의내용

- 국회 입법 시 단결권 확대와 더불어 기업이 불법 쟁의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병행 검토

* (예)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연장(2년→3년),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주요국의 대체근로 허용 사례>

국 가	주 요 내 용
미 국	파업시 일시적인 외부인력 대체뿐만 아니라 영구적 대체근로도 허용
독 일	파업참가 근로자에 대한 대체근로 허용(단, 파견근로자 투입은 금지)
프랑스	대체근로 금지규정이 없으며, 외부기업에 하도급 형식의 대체근로 활용
일 본	대체근로 금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파견에 의한 대체근로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세법 및 상법에 따른 주요 규제 대상으로, 내부거래에 대한 중복 규제 및 규제 강화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 (공정거래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상장 30%, 비상장 20%)와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 제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중소 50%, 3년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 40%, 그 외 기업 30%)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 (상법)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의무 규정 등
- 특히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중소기업 간 거래는 제외되는 반면 중견기업 간 거래는 고려되지 않고 있어 중견기업의 투자 유인이 더욱 감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저해
 - * 실제로 중견기업의 52.1%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응답(중견련, “일감몰아주기 과세 실태조사”, 2013)

사 례

- ◆ A사는 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서 같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부실기업 B사를 고객사의 요청으로 인수했으며 고객사가 B사 생산 부품을 A사의 이름으로 납품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A사와 B사 간 거래가 발생. A사는 고객사에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과세로 B사가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가 통보를 받음.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감 몰아주기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
- ◆ C사는 정부의 축산계열화사업 정책에 따라 축산업 계열사를 적극적으로 설립·운영해 왔으며 계열사 간 거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어 과세 부담
- ◆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D사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부실 협력업체를 인수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을 승계함. 자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일감을 제공했으나,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 '14.5월

-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거래비용 절감, 효율적 자원의 재분배, 거래 중단 위험 감소, 산업·업종 특성상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요소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해당
-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편취, 조세 회피,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터널링* 의도가 없는 내부거래까지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큼
- * 터널링(tunneling) : 지배주주의 자기거래 등 부(富)의 이전행위
-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부와 경영권의 편법승계”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하여 차단해야겠지만,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건의내용

-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가 목적이 아닌 정상 내부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상법상 보통결의는 출석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수,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
- 2017년 새도보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안건이 부결되는 회사 수가 급증
 -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결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 수는 '18년 76개사에서 '19년 188개사로 급증하고 있음
 - 안건이 부결된 회사 중 97.3%가 중소·중견기업이며, 대기업은 2.7%에 불과
 - * 기업규모별 부결사 현황 : ('18년) 大 2, 中堅 18, 中小 56 → ('19년) 大 5, 中堅 55, 中小 128
 - 부결 안건별 현황을 보면, 감사선임의 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정관변경의 건 順으로 나타남

<부결 안건별 현황>

(단위 : 개사)

부결안건	2019년 부결사		2018년 부결사	
	유 가	코스닥	유 가	코스닥
감사선임의 건	28	116	3	50
감사위원 선임의 건	-	5	2	1
정관변경의 건	5	47	-	12
이사 선임의 건	2	6	1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	11	1	1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	10	-	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2	-	2
감사 해임의 건	-	1	-	0
이사 해임의 건	-	2	-	0
기타	-	-	-	6
합 계	38	200	7	96

* 2개 이상 안건 부결사 : 2019년도 50개사(2018년도 27개사)

** 상장사협의회, 2018년 12월 결산사 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 '19.4.8

- 특히,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행사는 발행주식총수 3%로 제한하고 있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기 더욱 어려움
 - 감사 선임을 위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재차 부결되는 상황 발생
 - * 한국경제, “임시 주총까지 열었지만... 상장사들, 감사 선임 실패 잇따라”, '18.6.20
 -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수가 미달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주가하락과 더불어 심각할 경우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음

□ 해외사례

- 주요국은 실제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소 찬성요건까지 규정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주총회 결의방법 비교>

구 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일정비율이상 찬성 요건	보통결의	특별결의
한 국	X	0 (보통 1/4 찬성) (특별 1/3 찬성)	출석과반수	출석 2/3
미 국 (RMBCA)	X	X	출석과반수	정관자치
일 본	△ (과반수 참석)	X	출석과반수 (정관배제 가능 ¹⁾)	출석 2/3 (정관으로 1/3 조정가능)
영 국	△ (주주 2인 이상)	X	출석과반수	출석 3/4
독 일	X	X	출석과반수	출석 3/4
프랑스	0 (보통 1/5 참석) (특별 1/4 참석)	X	출석과반수	출석 2/3
캐나다	0 (과반수 참석)	X	출석과반수	출석 66.6%
호 주	△ (주주 2인 이상)	X	출석과반수	출석 2/3
중 국	X	X	출석과반수	출석 2/3

1) 임원 선·해임의 경우 정관으로 1/3로 조정 가능, 완전배제 불가

* X : 없음, 0 : 있음, △ : 정관자치 가능 또는 주주 수 기준

*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중견기업연합회,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 '17.2월

□ 건의내용

- 일정비율 이상 찬성요건 폐지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공격수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반면, 적대적 M&A 공격시 기업의 방어 수단은 자사주 취득 외에는 거의 없음

*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98.2월),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제한 폐지('98.5월) 등

- 기업사냥꾼들의 적대적 M&A 위협 시 국내기업은 적절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R&D나 신산업 진출 등 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자금이 자사주 취득 등에 불필요하게 소요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계 펀드 공격 사례>

연도	기업	펀드	주요 내용
1999	SK	타이거	- SK 지분 9.85% 확보 후 경영권 간섭 - 1년 만에 주식 전량 매각 6,300억원 시세차익 - SK, 경영권 방어에 2조원 투입
2003	SK	소버린	- SK 지분 14.99% 매입 후 지배구조 개선 등 요구 - 2년 3개월 만에 전량 매각, 1조원 이상의 차익 획득 - SK, 백기사 모집 등에 1조원 이상 투입
2004	삼성물산	헤르메스	- 삼성물산 지분 5% 매입 후 우선주 소각 등 요구 - 8개월 만에 주식 매각, 380억 원 이상의 차익 획득
2006	KT&G	칼 아이칸	- KT&G 지분 6.6% 매입 후 자회사 매각 등 요구 - 배당 확대, 주가 상승 등으로 1,500억 원 이상 차익 획득 - KT&G,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약 2조 8000억 원 투입
2015	삼성물산	엘리엇	-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약 140억 원 이익 획득
2016	삼성전자	엘리엇	- 삼성전자 분할, 나스닥 상장, 자사주 소각, 특별배당 요구
2018	현대모비스	엘리엇	-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 반대

* 매일경제, “주가 오르면 ‘먹튀’ 한국기업 이번에도 당하나”, '18.4.4

* 중앙이코노미스트, “[외국 자본의 두 얼굴] 시세차익 챙기고 경영권까지 위협”, 1437호, 2018

□ 해외사례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황금주, 테뉴어보팅,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고 있음

<주요국의 차등의결권주식 제도>

구분	주요 내용	근거 규정
미국	- 정관에 따라 의결권의 내용 및 수가 다른 종류주식 발행 허용	-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12조 - 뉴욕주 회사법 제501조 - NYSE 상장규정 제313조 및 보충서 제10조 - NASDAQ 주식시장규정 제5640조 및 해설서 제5640조
영국	- 정관에 따라 의결권의 내용 및 수가 다른 종류주식 발행 허용	- 영국 회사법 제284조
일본	- 정관에 따라 거부권부주식 발행 허용 - 단원주제도* 도입 * 일정한 수의 주식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 부여	- 일본 회사법 제108조 제1항 제8호, 제323조, 제188조 제1항
프랑스	-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의 수가 다른 테뉴어보팅 제도 채택(opt-out 방식)	- 프랑스 상법 제L225-123조 - Florange Law 제7조

* 상장회사협의회, '18.6월

□ 건의내용

- 기업이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생산 및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 필, 테뉴어보팅 등 경영권 방어책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부실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필요

- 법정관리기업은 '07년 248건에서 '17년 1,577건으로 급증하였으며, 한계기업* 수는 '10년 2,400개에서 '16년 3,126개로 증가

* 이자보상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

<법정관리 접수 건수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회생 (합의기준)	132	366	669	630	712	803	835	872	925	936	878
파산	116	191	226	253	312	396	461	540	587	740	699
합계	248	557	895	883	1,024	1,199	1,296	1,412	1,512	1,676	1,577

* 출처 : 대법원, 사법연감 각 년호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한계기업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계기업 (비중)	2,400 (11.4)	2,604 (11.9)	2,794 (12.4)	3,034 (13.2)	3,239 (14.3)	3,278 (14.7)	3,126 (14.2)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금융안정상황('18.3월)

- 금융감독원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 징후기업은 '15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

<부실 징후기업 수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 감
합 계	133	152	159	229	208	199	190	△ 9
C등급	60	81	65	97	84	74	53	△21
D등급	73	71	94	132	124	125	137	+12
대 기 업	36	40	34	54*	32	25	10	△15
C등급	15	27	11	27	13	13	5	△ 8
D등급	21	13	23	27	19	12	5	△ 7
중소기업	97	112	125	175	176	174	180	+6
C등급	45	54	54	70	71	61	48	△13
D등급	52	58	71	105	105	113	132	+19

* 수시 신용위험평가 포함(부실징후기업 19개사), 대기업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 500억원 미만

○ 현행 구조조정제도는 정부주도로 채권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

- 법정관리 대상기업의 선정기준 미흡, 채무변제에 우선권을 둔 의사결정, 전문 지식부족, 관치금융 등으로 구조조정 지연 우려

* 오영하, 법정관리에서의 채권자와 주주의 지위에 관한 소고, 법학논문집 제40집 제3호, 2016

- 워크아웃은 채권은행의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초기 실패율(1·2년차 16.2%)이 높고 장기지연* 되는 등 실효성이 낮음(금융감독원 '18.1.26)

* 17년말 현재 3년 초과 워크아웃 진행 업체는 16개로 전체(31개)의 과반수

-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 신청 기업 184개사('08년~'16.6월)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자금 71조 8,402억원 중 회수금액은 15조 8,043억원에 불과 (약 56조 359억원 평가손실 예상)

* 현석, 기업구조조정의 한계와 향후 정책과제, 서울대금융경제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공동정책세미나, '17.5.31

- 부실기업 등의 구조조정 지연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
 -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내의 정상기업의 고용과 생산성에도 부(-)의 영향을 미침
 - * 최현경 외, 한계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17.12월
 -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기업 등 부실기업 처리 지연은 정책자금 투입을 통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 M&A 활성화는 선제적 부실기업 정리 및 경영정상화를 통해 정책금융 투입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
 - 자금력 있는 기업집단이 부실기업(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기업) 등을 인수할 경우 계열 편입을 유예하는 등 부실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건의내용

- 기업집단이 부실기업 등을 인수할 경우 일정기간(예 : 7년) 동안 계열 편입 유예

※ 계열 편입 유예 관련 입법례(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16.3월)

- 민간투자사업법인 계열 편입 유예제도 도입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 SPC의 최다출자자가 임원구성·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건설공사 기간 동안 계열 편입 유예
- 중소벤처기업 계열 편입 유예기간 연장 :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M&A하는 경우 계열 편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